

사회

사라진 연구비 수억원

검찰이 순천대학교 일부 교수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연구비를 횡령한 정황을 잡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순천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순천대 산학협력

단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근 3년여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5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순천대 교수 횡령의혹
검찰, 압수수색 벌여
사법처리 여부에 긴장

경우 파문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들의 횡령 규모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정확한 연구비 사용 내역과 학교 관계자들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오는 29일께 수사 내용과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연루된 교수들의 사법 처리 여부나 규모 등을 놓고 대학 안팎에서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연락두절 오현섭 시장

여수시 야간 경관조명 사업에서의 '야간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오현섭 시장이 나흘째 연락이 두절된 혐의로 증폭되고 있다.

24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의 휴가가 끝났지만, 이날 시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여수 경관조명사업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로 여수시청 전 국장급 간부 김모(여·59)씨가 경찰에 구속되자 둘째 휴가를 낸 뒤 나흘째 연락을 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또 시청 층에 휴가를 연장하거나 언제 출근하겠다는 뜻

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여수시청 안팎에서는

는 오 시장이 경찰 출두에 대비해

법적 대응 등 준비를 하느라 잠적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여수시 조명 비리 의혹
휴가 끝나도 출근 안해
경찰, 축근도 체포영장

경찰은 야간경관조명 업체인 나이토피아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오 시장의 축근인 주모(67)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오 시장이 뇌물수수에 연루됐는지를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24일 주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주씨는 이미 지난달 조례 축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데

다

오 시장은 경찰 출두에 대비해 축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데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약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밝힌 이후 경찰한테서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지난 16일 양현서의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발표한 다음 날인 17일부터 22일 까지 6일 동안 경찰을 피진정기관으로 한 진정이 43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고문의혹 발표 이전에 비하면 약 배로 늘어난 수치라고 인권위는 말했다. 고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도 1건 접수돼 현재 인권위의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내용이 사실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접수된 진정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교육청 전교조 3명 중징계 요구

교과부와 마찰 피해 ... 징계수위는 사법처리 이후에

광주시교육청이 민노당 가입과 당비납부 등의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3명(초등 2명, 중등 1명)을 중징계 의결해 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 전교조의 법적 대응 등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시 교육청은 24일 "해당 교사에 대

교과부 교원 배정 '도서벽지형' 수용

전남 내년 500명선 감축

내년 전남지역 교원 감축 규모는 5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4일 "도시벽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원 배정기준인 4개 지역군에서 도서벽지형을 주

한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 방침을 불가피하게 따랐으나 최종 징계 수위는 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요구로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교육청은 전남과 전북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

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의견을 표명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요구로 날로부터 최고 90일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전교조 광주지부 측이 경기 교육청과 같이 '경진계 요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중징계 원칙을 정한 교과부와의 불필요한 마찰 초래, 예산지원 축소, 교육현장 혼란 등 전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이 중징계 요구 절차를 밟은 것은 교과부 방침 수용, 다른 시도 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지만 징계수위는 사법처리를 지켜본 후 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교과부와 전교조 주장은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에 가혹행위 당했다"

인권위에 진정 쇄도

성범죄 무서워 화장실 짓지 말라?

복구 문산 어린이공원

일부 주민 반대로 차질

"화장실을 크게 만들면 범죄가 늘어난다고?"

우범·탈선자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광주의 한 도심 공원 내 친환경 화장실 신·증축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 복구는 예산 7600만원을 투입해 문동동 문산초등학교 인근의 문산 어린이공원 내에 31.2m² 크기의 화장실을 짓고 있다. 이 공사는 기존 9m² 크기의 남·여 공용화장실을 3배 이상 증축하는 것으로, 다음달 4일 완공 예정이다.

이 공사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 중인 문산 어린이공원 친환경

놀이터 리모델링 조성 사업 과정에서 '낡은 화장실도 바꿔 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산 어린이공원 인근 주택가 주민 100여명이 친환경 화장실 신축공사 반대를 주장하면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화장실이 설치되면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데다, 상가 조망권마저 침해받게 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며 "공사 종이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친환경 화장실 조성사업에 찬성하는 주민 김모(여·43)씨는 "당연히 정비해야 할 화장실을 두고 일부 주민들의 억지성 민원을 보고만 있자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

출근길 여성 앞에서 놓된 것



○...광주동부경
찰은 24일 출근하
는 여성 앞에서 자
신의 성기를 끼여 음란행위를 한 차
모(39·광주시 동구 지원동)씨를 공
연연락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지원동 K카센터 앞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김모(여·25·광주시 동구 지원동)씨를 보자마자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차씨는 이날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에서 "쟤는 차마 입은 여성을 보자 성적 욕망을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암드작 7월 새설 합격률 강사진

남보다 뛰어난 학력의 기회는 바로 어름방학이다!

공무원 합격전략 설명회

일시: 6월 25일(금) 14:30 ~ 18:00

타원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5년연속 호남지역 최다합격자 및 수석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수강생 80%이상 학원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복구현 061-234-0234)

